



농업개방,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 박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명명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가 공식출범하면서 농업계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도하 라운드의 협상 방향을 정한 각료 선언문은 농업분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삭감과 폐지,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협상을 전개하되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선언문은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가 협상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이 협상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협상 일정과 관련해서는 2003년 3월까지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을 확정하고, 2003년 말에 예정되

어 있는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이 양허안을 제출하여 늦어도 2005년 1월1일 전에는 협상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농업협상, 협상태도 따라 결과 크게 달라져

이와 같은 각료 선언문은 ‘불만족의 균형’으로 표현되듯이 농산물수출국과 수입국의 주장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농업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농업협상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도하 라운드 농업협상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도하 라운드 농업협상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을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제적 여건은 UR 협상에 비해 수출국과 수입국의 공방 열기가 훨씬 뜨겁지만 기본적 구도는 UR 농업협상



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도 UR 협상과 마찬가지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모호한 정치적 타협으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DDA 협상을 둘러싼 국내적 여건은 과거 UR 협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게 변하였다. UR 협상 당시 우리 사회는 외국의 값싼 농산물로부터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매우 다르다. 국내의 자유무역론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압력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2004년 뉴 라운드 발족을 앞두고 농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농업개방을 공론화 하며 농업부문의 양보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늘려가야

한다”고 하여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굴욕적인 마늘협상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농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중국과의 굴욕적인 마늘협상은 우리에게 향후 우리 정부의 농업협상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정부는 휴대폰 등 공산품의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마늘 농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를 금년까지만 발동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국제통상법의 관계에 어긋나는 굴욕적 협상일 뿐 아니라, 정부는 그 사실을 일반에 공개조차하지 않았다. 더욱이 무역위원회는 정부의 마늘중합대책을 발표하자 그것을 근거로 즉시 마늘 피해조사가 불필요하다는 불법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세이프 가드의 연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중국과의 마늘협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국익을 앞세운 '농업희생론'의 단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자세로는 DDA 농업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우리 농업의 장래도 보장하기 어렵다. 국제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DDA 농업협상 자체는 큰 틀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공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그러나 DDA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개

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냐, 2004년 쌀 제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협상 태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농업을 둘러싼 국내여건은 매우 좋지 않다.

엄청난 농업희생론, 이론적 근거는 매우 단순

우리 사회의 대세를 이루는 시장지상주의자(자유무역론자)들은 계량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부문을 개방하면 할수록, 달리 말하면 국내농업이 축소되면 될수록 국민후생은 증

**‘자유무역 효과’ 특정 산업·계급에 집중, 사회적 불공평 심화
정부, 농정실패 비판 견허수용·목표 체계 수단 근본 정비해야**



가한다고 주장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유 무역론들자에 따르면 우리 나라 농업이 없어지는 것이 경제성장과 국민후생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 엄청난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근거는 매우 단순하다. 즉 자유무역에 의해 값싼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농민들은 피해를 입지만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얻는 소비자들의 이익이 그 보다 크므로 나라 전체로는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계량모형에서는 오늘날 국제협상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농업의 비교역적 역할 혹은 다원적 기능(식량안보,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환경 및 국토의 보전, 문화 및 전통의 계승, 도시인의 안식처 제공 등)은 농산물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무시된다. 우리 나라는 이미 지나치게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농촌인구의 과소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유무역으로 국내농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해 농촌지역사회가 붕괴된다면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한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자유무역으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협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유무역론 비판, 국익적 관점서 이뤄져야

자유무역론에 대해 농업계는 가끔 모순적 입장을 보인다. 즉 자유무역이 국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인정하지만 농업부문은 피해가 크므로 제외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최근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율배반적 태도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자유무역은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이익에는 기여하지만 국익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오늘날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체제는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즉 WTO 체제 출범 이후 동아시아 및 남미의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중속 심화와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의 증대를 가져오고, 노동자의 권리, 인권 및 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유무역의 효

과가 산업부문간, 계급간에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익 배분과 비용 부담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과 비용이 특정 산업 및 계급에 집중되어 사회적 불공평을 더욱 악화시킨다. 뿐 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국제경제환경이 조금만 나빠져도 곧 동반 불황에 빠지는 허약한 체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역 증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무역(free trade)이 아니라 '무역의 자유'(freedom of trade)와 '공정한 무역'(fair trade)이다. 따라서 농업계는 농업부문의 이기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자유무역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고 하였지만 지금처럼 국내농업에 대한 여론이 냉담한 적은 없다. 일부 보수 언론은 '소탐대실'이니 '농업 발목잡기' 등의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마치 농업보호가 국익에 반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농정당국과 농업계는 농업예산의 확대나 농업보호의 필요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 지난날의 농정 실패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변화 방향 그리고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에 맞도록 농정목표와 농정체계, 농정수단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약정보**